

6300억 규모 특별금융 공급 개시 부품업체 관세 충격 완화 기대감

산업부, 수출금융 지원 협약 체결
무보 보증기간 확대·보증료율 인하
협력사 저리 자금 조달 숨통 기대
디와이오토 등 첫 수혜기업 등장
전략산업 대미 협력·지원책 병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에 대응해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해 중소 자동차 부품 업체에 6300억원 규모 특별 우대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충남 아산시 소재 자동차 부품사인 디와이오토에서 김정관 장관, 성 김 현대차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 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을 열고 자동차 협력사를 위한 특별 저리 금융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와 하나은행이 400억원을 무역보험기금에 특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총 63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협력사에 공급한다. 완성차 기업이 직접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신설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수출공급강화보증)’은 협력사가 완성차사에 납품할 때 필요한 제작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나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2% 포인트 낮추고, 무보는 보증한도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며, 보증료율도 기존 1%에서 0.65%로 낮췄다.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대신 부담한다.

첫 수혜기업은 이날 간담회가 열린 디와이오토다. 김 장관은 임연찬 디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특수선 제작 야드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이오토 대표에게 ‘1호 보증서’를 직접 전달했다. 디와이오토는 1978년 설립한 회사로 자동차용 와이퍼 모터, 파워 윈도우 모터, 선루프 모터 등을 생산한다. 이번 지원으로 2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원자재 확보와 수주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임 대표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하게 돼 안정적 납품뿐 아니라 시설투자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디와이오토에 이어 최재홍 서진산업 대표와 김남교 엔티엠 대표에게 각각 2호, 3호 보증서가 전달됐다. 이들 기업엔 각각 150억원, 80억원이 자금으로 지원된다.

성 김 현대차 사장은 “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금융상품은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성차 기업 입장에서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7월까지 우리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에도 플러스를 유지한 것은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치하하고 “관세 조치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차질없이 추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에서 대미 협력을 확대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금번 관세 협상 타결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디와이오토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임직원들을 격려했고, 최근 폭우와 폭염 등에 따른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공감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현장 소통형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어촌공사, 중대재해 예방 총력전

700곳 건설현장 전수 점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700여 개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공사 전 사업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국 고위험사업장別に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선정해,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이 특징이다.

공사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5대 중대재해를 비롯한 12대 핵심 안전 수

칙에 기반 침하 상태 등 집중호우 관련 점검 항목을 추가해 현장 안전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수 점검은 사업 현장을 담당하는 전국 지사와 사업단이 주관하며, 본사는 산업재해 이력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선제적 점검과 예방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아무리 좋은 목적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정당성을 잃게 된다”며 “사람 중심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서부발전, 지역주민·임직원 가족 여름 캠프

태안 이전 10주년 ‘위피 썸머 캠프’ 성료

한국서부발전은 본사 태안 이전 1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과 임직원 가족이 함께하는 ‘위피 썸머 캠프(Weepy Summer Camp)’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캠프는 충남 태안 지역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과 서부발전 임직원 가족 등 약 160명, 40여 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전주와 충남 보령 일대에서 지난 6일~16일까지 총 5차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주 한옥마을·‘완산병커 더스페이스’ 전시 관람 ▲봉어섬 생태공원·임실치즈테마파크탐방 ▲온천·수영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자연 체험과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연 관람과 보령 해상유람선 투어로 여정을 마무리했다.

지역 주민들은 “평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아이들과 웃고 대화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며 “서부발전이 마련한 따뜻한 기회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캠프가 가족 간 사랑을 되새기고 10년간 함께해 온 지역 이웃 간의 소중한 인연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본사 태안 이전 1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과 임직원 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지난 6일~16일까지 총 5차례 2박3일 일정으로 ‘위피 썸머 캠프(Weepy Summer Camp)’를 개최했다. /서부발전

LPG 셀프충전 허용·반려동물품 삼푸 규제 완화

공정위, 관계부처 협의 후 개선방안
소비자 편의 확대·사업자 부담 완화
고령화·친환경 대응 규제 개선안 포함

올해 하반기부터 LPG 셀프충전이 허용되고, 반려동물용품삼푸 등 동물용의약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 9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소비자 편의 확대와 사업자 부담 완화다. 먼저 오는 11월부터는 일정한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도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LPG 충전은 반드시 충전소 직원이 해야 했으나, 셀프 충전이 허용되면 인건비 절감으로 충전소 경영난이 완화되고, 야간·공유일 충전 불편이 줄어든다. 환경 친화적 연료인 LPG 차량 수요 확대도 기대된다.

또 반려동물용 삼푸·린스·향수 제조시 약사·한약사 자격자를 의무적으로 뒤야 했던 규정도 완화된다. 그간 반려

동물용 삼푸 등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별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뒤야 했다. 특히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겸임이 불가해 제조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 사람이 쓰는 삼푸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 물품을 다룰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 관리자를 뒤야 해 화장품 제조업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 개발과 판매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약사·한약사가 아니어도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제조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어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와 화장품 제조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도 가능해진다.

고령화 사회에 맞춘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져 혈압·혈당 측정 같은 비의료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가 가능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공동상표 제품 위탁 구매시 인증 의무면제 품목을 인쇄·광고물 기준으로 23개에서 36개로 확대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신청시 모든 조합원사의 참여 조건을 완화해 사업 진입 장벽을 낮췄다.

안전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총포·화약류 허가 신청에 필요한 신체검사 항목도 명확히 규정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요건 중 수집·운반 차량 적재능력 기준이 없음을 분명히 해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했다.

이밖에 소관 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업에 필요한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 적재능력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전파했다. 이에 따라 향후 폐기물 재활용업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올해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진입제한, 사업 화물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능등급제 맞춤 교육

전국서 12개 직종 승급·기초교육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2025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현장 경력, 자격, 교육·훈련 이력 등을 종합 반영해 직종별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다.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공 품질 제고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공제회에 위탁해 시행하는 현장 중심 과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식비·교통비

까지 지원된다.

교육과정은 ▲형틀목공, 건축목공, 콘크리트, 비계, 견출, 코킹, 수장, 석공, 창호, 일반기계설비, 일반특수용접, 조경 등 12개 직종의 ‘승급교육’과 ▲건설업 입문자를 위한 철근·콘크리트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등 3개 업종의 ‘기초기능교육’으로 나뉜다.

교육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기관별로 순차 진행된다. 신청은 교육기관에 전화 접수하면 되고, 세부 일정은 ‘건설기능플러스’ 안내 페이지(<https://cw.or.kr/plus/skill/system/skillGradEdu.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